# “내 가족 살기 좋아야 정착 … 교육·생활인프라 개선 시급”

빛가람에너지밸리 성공전략

**혁신도시를 혁신하다**

❺ 에너지밸리 선결 과제(2)

## 직원 대부분 출·퇴근 하거나 기러기 생활
## 기업들도 직원들 반대 부딪혀 입주 고민
## “조기 정착 열쇠는 정주여건 개선” 36%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빛가람에너지밸리’의 성공 열쇠 중 하나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의 입주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입주 기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입주 기업의 목소리는 더욱 많은 기업이 나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름길이다. 혁신도시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본사만 옮겨 오고 실질적인 생산시설은 기존의 지역에 두는 ‘껍데기 이주’를 막는 방법도 기업의 요구를 제때 해결해 주면서 시작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고심에 빠졌다. 나주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 직원들이 여전히 가족 없이 홀로 나주에 거주하는 것처럼 협력 업체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는 달리 이들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직원 이직이 잦고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생활 권역을 나주로 옮겼을 때 직원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나주 정착이 더딘 것처럼 이들 협력업체가 ‘나주 살이’를 꺼린다면 에너지벨리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전 기관 직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을 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나주의 전반적인 여건이 다소 미비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해 4월 한전, 한전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 등의 직원 157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에너지밸리 관련 이주 기관 직원들은 에너지밸리의 슬로건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44.6%)를 택했다. 이어 ‘에너지산업벨트’(30.6%), ‘한국의 실리콘 밸리’(10.2%), ‘창조경제 혁신구역’(7.6%), ‘기술특구 및 과학타운’(5.1%) 등의 슬로건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일과 주거가 공존하는 쾌적한 정주 환경 개선’(30.6%)을 뽑았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에너지밸리에서 일을 하게 될 이전기관 직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일을 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문화를 즐기고 교육을 할 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한 신시장 창출기반 마련 등 촉매제 역할 강화’(28.7%),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적 생태계 조성’(19.7%), ‘에너지정책과 R&D 연계 활성화 등 문제 해결능력 강화’(12.1%),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제공 체계 구축’(7.6%)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에너지밸리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에너지밸리 조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35.7%)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 ‘기술선도 에너지기업 유치’(24.2%), ‘산학연 R&D 투자 확대’(15.9%), ‘맞춤형 에너지 전문인력양성’(11.5%), ‘에너지관련 창업활성화 지원’(8.3%), 중소기업 육성펀드 조성’(3.8%), ‘지역향토기업 업종전환 유도’(0.6%)로 순이었다.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산업이 따라온다’는 말은 혁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거론됐던 문제다. 쉽게 말해 이주 기관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나주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에너지밸리 조성에도 중요하다.

비교적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비해 이직이 덜한 공공기관 직원들도 여전히 아직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광주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작정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에너지밸리 입주를 요구할 수는 없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유치보다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

에너지밸리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에너지밸리 정착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39.5%)과 ‘인프라 구축 및 연계’(21%), ‘문화생활 등 정주인프라 확충’(14%)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기업이 따라 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에너지밸리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 같은 요구는 계속됐다.

응답자들은 에너지밸리 지속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방향으로 ‘고품격 자족형 복합 산업도시 환경’(29%)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대기업·중견기업 유치’(21.6%),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13.4%), ‘에너지 인재양성과 특성화대학 설립’(12.7%), ‘지역특화분야와 연계한 선택과 집중’(10.2%), ‘지식정보교류·융합 활성화’(5.1%)순으로 중요하다고 봤다.

에너지밸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혁신도시 나주 인근산단 구역까지 포함해야 한다’(32.7%)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혁신도시 광주·전남 주변산단 모든 구역 포함’(26.9%), ‘지리적 범위 탈피 광역적 개방형 구역 설정’(21.8%),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역만 포함’(17.9%) 순으로 답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업·지자체·연구소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혁신도시 주변 광주·전남 산업단지 모든 구역을 포함해야 한다’(49.6%)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역 전문가들은 에너지밸리의 공간적 개념을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의 주변 산단이 협력하는 형태를 선호했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에너지벨리와 인근 산단으로 줄여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도 에너지밸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시점을 ‘10년 이내’(36.5%)로 내다봤고 ‘5년 이내’(18.6%), ‘7년 이내’(12.2%)로 답했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웅희 책임연구위원은 “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은 연계협력과 산업시설 인프라 확장, 인근산단 연관기업 유치 등을 긍정적 여건으로 생각했지만 교육과 정주여건 등은 부정적이었다”면서 “에너지밸리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술선도 에너지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함덕해수욕장 해변 수익형 호텔

회사 보유분 마지막 특별분양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바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풀장, 옥상정원 등 수준 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가치가 펼쳐집니다

제주현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9번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 올레 19번길)

모델하우스 서구 농성동 481-28번지(상록회관-라페스타웨딩홀 옆)

분양문의 1600-2949

1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투자금 대비 V.A.T 제외/50% 대출조건)

2 계약시부터 계약금×연 5% 수익지급

3 연 10일 무료숙박(성수기 2일/비수기 8일)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운영 (주)유탑디엔씨 시공 (주)유탑건설 (주)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M (주)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탁 (주)무궁화신탁 운영자문 (주)팰리스호텔&리조트 분양대행사 (주)수현